

한중경제포럼

제22-01호 2022년 6월 16일

2022년 중국 경제발전 목표와 정책 특징

2022년 제1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2022년 중국 경제발전 목표와 정책 특징
2. 일 시: 2022. 6. 10(금) 16:00~18:00
3. 발표자: 중국거시경제연구원 쑤쉐궁(孙学工) 주임

1. 2022년 중국 경제발전 목표

- 중국은 지난 3월에 열린 양회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도시 신규 취업자 수, 소비자물가지수, 식량 생산량 등 2022년 적극적인 성장 목표를 제시함.
 -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는 시장 예측을 상회한 5.5% 내외로 제시함.
 - [배경]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은 여러 가지 새로운 요인의 영향으로 경제 하방 압력에 처하게 되면서 작년 3, 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모두 5% 미만에 그쳤음. 그리고 올해에 새로운 불안정 요인들이 또 추가되었는데 그중에는 선진국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이 급선회한 것이 있음. 양회가 개최된 시기에 코로나19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제된 상황이었고 작년의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올해에 비교적 정상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음. 올해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에 대해 대부분의 시장 예측은 5% 정도에 머물렀는데 실제로 5.5%의 목표치가 발표된 후 아주 공격적인 목표라고 평가받고 있음.
 - 5.5% 내외의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우선 취업 안정·민생 보장·리스크 예방을 위한 수요에서 비롯됨. 취업 면에서 볼 때 경제성장률이 1% 상승하면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 올해 5.5%의 성장률은 1,100만 명의 취업자 수 목표치와 맞물림.
 - 또한 이 성장률 목표치는 "14·5" 계획 목표와 상호 연계되는 것임. "14·5" 계획 내용 중에 경제성장률 목표에 대해 명확히 제시한 내용은 없지만 계획의 많은 GDP와 관련된 지표들은 은연중 5.5%의 성장률 목표를 내포하고 있음.

- 그리고 시장의 자신감을 진작시키기 위한 것도 있음. 지난 연속 몇 개 분기의 성장률이 5% 미만에 그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경제 하방 추세에 대해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도시 신규 취업자 수 목표는 실제 취업수요에 근거해 1,100만 명 이상으로 제시함.
- 올해 대학 졸업생 수는 1,076만 명으로 처음으로 1천만 명을 초과하였고, 직업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400만 명에 달함.
- 도시 신규 노동력 수는 1,576만 명임.
- 정년퇴직을 제외하고 1,100만 개의 일자리가 순 증가함.
- 도시조사실업률 목표치는 작년보다 더 적극적인 연간 5.5% 이내로 제시함.
- 작년의 도시조사실업률 목표치는 5.5% 내외였는데 올해에는 명확히 5.5% 미만으로 낮출 것을 요구함.
- 2022년 물가는 '안정'이 목표이며,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3% 내외로 제시함. 올해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CPI가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에 관련된 중요한 지표임을 고려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함.
-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40년 이래 최고 수준에 달하였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음.
- 국제 에너지 등 제품의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에 일정한 압력이 존재함.
- 작년에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높고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낮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PPI가 CPI에 전달되는 효과가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됨.
- 주민소득 증가 속도와 경제발전 속도를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수준을 유지함.
- 대외무역의 안정 유지 및 질적 제고를 달성하고, 국제수지의 기본적 균형을 유지함.
- 식량 생산량 목표치는 6.5억 톤 이상으로, 이는 마지노선을 지키는 원칙을 구현함.
- 식량 생산량 6.5억 톤은 "14·5" 계획 시기의 목표와 일치함.
- 작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식량안보에 대해 강조하였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 식량안보에 대해 강조한 것은 매우 선제적이었음. 시진핑 주석도 "중국인의 밥그릇은 중국 곡식으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음.
- 현재 곡물 수급은 여전히 빠듯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 2021년 곡물 수입량은 1.65억 톤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그중에 대두 수입량은 9,600만 톤에 달함. 수입하는 곡물의 대부분은 사료용이며, 식량의 자급률은 95% 이상에 달함.
- 육류 등 목축업 제품의 대외의존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임.
- 그리고 생태환경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목표도 제시함.

2. 2022년의 다양한 정책 도구

□ 중국은 2022년에 거시정책을 분야별로 강력하게 시행할 것임.

- 2022년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26조 7,125억 위안으로 2조 위안 이상 확대됨. 전국 정부기금예산 지출은 전년 대비 22.3% 증가한 13조 8,991.34억 위안으로 2.5조 위안 확대됨.
- GDP 대비 재정적자율은 2.8% 내외로, 작년 실제 적자율 3.1% 대비 하향 조정함. 적자 규모는 작년보다 2천억 위안 감소한 3조 3,700억 위안임. 이는 재정의 온건성과 지속가능성에 유리함.
- 올해 늘어난 지출은 부채나 조세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정 잉여금이나 중앙 정부기금예산 등 중국방식의 자금통로를 통해 조달할 것임.
 - 공공재정 잉여금 규모는 2.33조 위안으로 작년의 1.17조 위안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임.
 - 중앙 정부기금예산과 중앙 국유자본 경영예산의 잉여금 규모는 9,900억 위안임.
 - 특정 국유금융기관과 전문 경영기관의 상납 이윤은 1.65조 위안에 달함.
- 2008년 금융위기 때 중국이 아주 큰 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번에는 이전의 교훈을 총결하여 재정정책 면에서 여지를 뒀으로써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그림 1. 최근 재정지출 증가 규모 (2019~22년)
(단위: 억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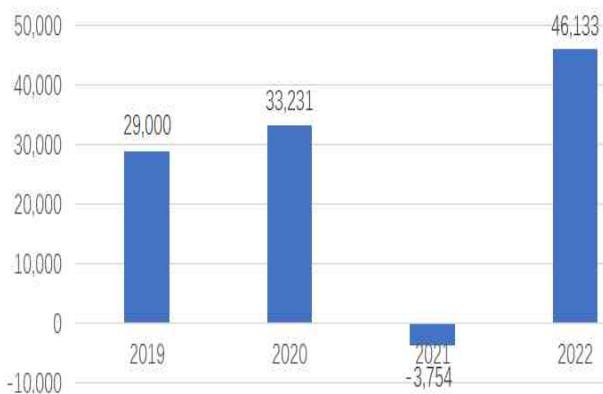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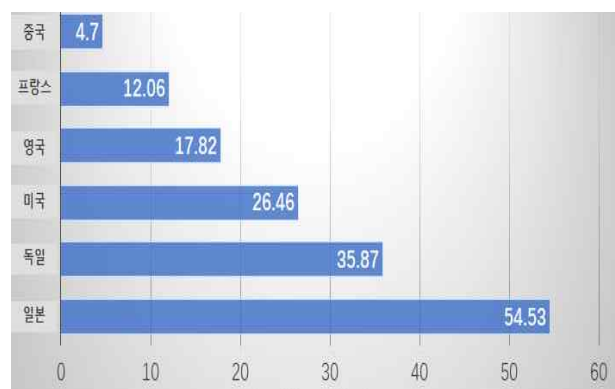


그림 2. 코로나에 대응한 주요국의 GDP 대비 재정투입 비중 (2021년 3월까지)



□ 그리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임.

- 신규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화폐 공급량 및 사회용자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과 기본적으로 일치시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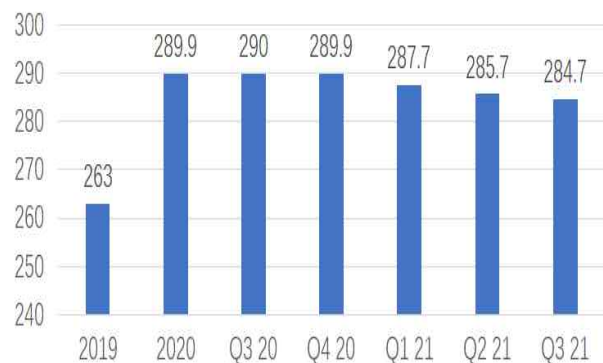
자 함.

- 금융기관의 실질 대출금리 인하와 경비지출 감소를 촉진시킴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의 편리성 개선과 자금조달 비용의 절감을 확실히 실감할 수 있도록 함.
 - 중국인민은행이 예전에는 기준을 인하를 주로 시행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올해 정책 방향에 맞춰 금리를 인하하였음.
- 구조적인 정책 면에서 중점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임.
 - 기존의 농업 지원과 소형·영세기업 지원, 녹색·저탄소, 석탄의 청정이용 관련 재대출 외에 과학기술 혁신과 포용적 양로의 두 가지 재대출 전문항목을 설립할 것임.
 - 포용적 금융의 발전을 지속 추진하고, 대형 은행의 소형·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장려함.
- 리스크 예방 면에서 거시 부채율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임.
 - 올해 4~5월에 국내 코로나 재확산의 영향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 안정을 위한 패키지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경제의 새로운 형세에 맞춰 거시 부채율을 적절하게 높일 수 있다고 목표를 조정함.

그림 3. 코로나19가 부채율을 더 상승시킴
(2019년 4분기 대비 2020년 3분기 상승폭)



그림 4. 코로나19 이후 중국 거시 부채율의 변화



□ 공급측 정책을 강화할 것임

- 정부투자, 소비쿠폰, 기업에 대한 감세·퇴세 등 여러 선택사항 중 기업에 대한 감세·환급(減退稅) 정책을 선택함. 새로운 복합적인 조세·비용 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단계적 조치와 제도적 안배를 서로 결합시켜 감세와 퇴세를 함께 추진함.
 - 올해 퇴세·감세 규모는 대략 2.5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중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환급(增值稅留抵退稅) 규모가 1.5조 위안에 달함.
 - 최근 발표한 경제 안정을 위한 패키지 정책에서는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환급 규모를 1,400억 위안 더 추가하였

으며 앞으로 몇 개월 내에 퇴세 금액을 전부 기업에 돌려줄 것을 요구함.

- 기업의 생산·경영 비용을 인하할 것임. 전기요금, 플랫폼 비용, 중개수수료, 행정수수료, 사회보험료, 임대료 등의 비용을 낮추고 부채청산을 강화할 것임.
- 최근 발표한 경제 안정을 위한 패키지 정책에서는 기업의 사회보험료 단계적 납부 연기, 임대료 감면 등 조치를 연말까지 실행하기로 함.
- 시장화·법치화·국제화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放管부(放管服)¹⁾ 개혁을 지속 추진함.
- 대중창업·만중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기업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규 기업의 설립을 지속 확대할 것임.
- 기업 혁신에 대한 장려를 강화함.
- R&D 비용에 대한 추가공제(加计扣除) 정책을 확대함.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공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확대하며, 기업의 기초연구 투입에 대해 세수우대정책을 실시함.
- 설비 및 기자재에 대한 가속상각과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소득세 우대정책을 완비할 것임.

□ 수요측 정책의 중점은 여전히 투자 확대임.

- 기업의 투자 확대에 주력함. 기업에 대해 감세 및 경비 절감(減稅降費) 정책, 추가공제, 가속상각 등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확대를 장려할 것임.
- 정부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함.
- 작년에 실적이 미미했던 인프라 투자를 올해에는 적절히 조기에 실시함.
- "14·5" 계획에서 확정된 102개 중대 프로젝트를 2,600여 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가속 추진할 것임.
- 중앙예산 내 투자규모는 6,4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00억 위안 증가함. 중앙예산 내 투자는 오랜 기간 규모를 늘린 적이 없었는데 올해 새로운 형세에 맞춰 증가됨.
- 올해 지방정부 특별채권은 작년과 동일하게 3조 6,500억 위안을 배정함.
- 작년 4분기에 발행한 1조 2천억 위안의 지방정부 특별채권도 주로 올해 사용될 것임.
- 부동산 투자를 안정시킴.
- 새로운 발전모델을 모색하고, 임대와 구매의 병행을 견지하며, 장기 임대주택 시장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보장형 주택 건설을 추진하며, 상품주택(商品房) 시장이 구매자의 합리적인 주택수요를 더욱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 토지가격·주택가격·시장예측을 안정시키며, 도시별 맞춤형 시책을 통해 부동산업의 선순환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함.
- 최근에 개인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소폭 인하되었음.

1)放管부 개혁은 행정 간소화, 행정능력 향상, 서비스 개선을 뜻함.

□ 소비촉진 정책은 장기적·제도적으로 추진할 것임.

-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를 촉진하고, 소득분배제도를 개선하여 소비능력을 향상시킴.
- 온/오프 라인 소비의 심도있는 융합을 추진하고, 생활서비스에 대한 소비 회복을 촉진하며, 소비의 신업태와 신모델을 발전시킴.
-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를 지속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녹색·스마트 가전의 하향(下乡)과 이구환신(以旧换新)²⁾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장려함.
 - 양회에서 발표한 정책에서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구매세를 50% 감면한다고 했는데 최근 발표한 경제안정을 위한 패키지 정책에서는 배기량 2.0ℓ 이하의 자동차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킴.
- 지역사회 양로·탁아 관련 시설의 건설을 확대하고, 기획·토지사용·주택사용 등을 지원하며, 가사 서비스업의 양적·질적 제고를 촉진함.
- 현금 지역의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농촌지역 전자상거래와 택배·물류·배송을 발전시킴.
-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대중의 수요에 부응하고 소비의욕을 증진시키는데 주력함.

□ 에너지 관리·감독 정책의 조정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소비 제한으로 인한 경제 하방 압력 요인을 제거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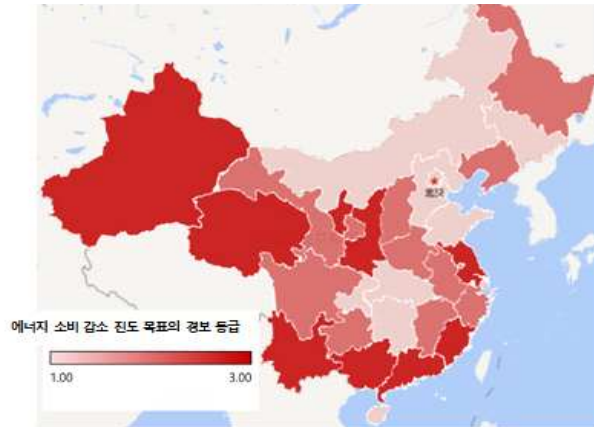
- 에너지 소비 강도 목표를 "14·5" 계획 기간 내에서 통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히 탄력적으로 운용함.
- 새롭게 증가된 재생 에너지와 원료용 에너지는 에너지 소비 총량 통제에서 제외시킴.
- 국가급 중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별도로 집계함.
-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双控)³⁾ 지표를 탄소배출의 이중 통제⁴⁾ 지표로 전환함.

2) 이구환신은 오래된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함.

3) 에너지 소비 총량과 에너지 소비 강도에 대한 통제를 뜻함.

4) 탄소배출 총량과 탄소배출 강도에 대한 통제를 뜻함.

그림 5. 2021년 상반기 각 지역별 에너지 소비 강도 저감 목표 경보 등급



□ 정책의 부합성 및 적시성이 더욱 향상될 것임.

- 식량 등 주요 농산물 공급을 보장하고, 에너지·핵심 원자재의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잘 수행하며, 민생과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에 필요한 전력을 보장함. 공업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촉진하고 원자재와 핵심 부품 등의 공급 보장을 강화함.
- 식당, 숙박, 소매, 문화, 관광, 여객운송 등 고용이 크고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많은 지원정책을 집중시켜 관련 업종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는 희망을 주어야 함.
- 코로나19의 충격이 큰 업종과 기업에 대해 융자 지원을 지속해 대출 제한, 대출 회수, 대출 중단을 피할 수 있도록 함.
- 정책 효과가 조기에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준비된 정책수단을 적시에 활용해야 함.
 - 지난 2월 국가발개위는 관련 부처와 함께 공업발전 지원을 위한 18조 정책과 서비스업 발전을 지원하는 43조 정책을 발표함.

그림 6. 각 산업별 회복 수준



그림 7. 주요 업종별 회복 수준



□ 정책 간 조화와 조합 수준을 제고할 것임.

- 각 지방 및 부처는 경제 안정의 책임을 확실히 지고, 경제 안정에 유리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함.
- 새로운 정책에 대한 평가분석을 강화하고, 경제 안정에 유리한 정책을 가속 추진하며, 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정책은 신중히 추진해야 함.
 - 작년에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쌍감(双减) 정책, 부동산 규제, 에너지 소비 통제, 빅테크 규제, 플랫폼 반독점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부처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평가분석을 진행해야 함.
- 중앙정부의 책임이 증대됨. 중앙재정은 더 많은 자금을 직접 조달범위 안에 포함시킬 것임.
 - 올해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전지출 규모는 9.8조 위안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대비 18%(1.5조 위안) 증가한 것으로, 최근 들어 가장 큰 증가폭임.
- 실사구시의 원칙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 국정(国情)에 입각하여, 중국 자신의 일을 잘 해결하는데 주력할 것임. 발전 법칙과 객관적 사실 및 대중의 수요를 존중하고 지역별 특징에 맞게 창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모든 분야에서 일하고 창업하는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시킬 것임.

□ 과학적이고 정밀한 코로나19 방역 통제 정책을 시행할 것임.

- 코로나19의 외부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재발을 억제하는 방역 정책을 지속 시행하고, 예방 및 통제 조치를 부단히 최적화하고 개선함.
-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R&D를 가속화하고, 백신 접종 업무를 지속적으로 잘 수행하며, 중의약의 독특한 효과를 잘 발휘하도록 함.
- 지역적인 코로나 확산에 대해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처리하여 정상적 생활·생산 질서를 유지할 것임.

그림 8. 작년 이후 코로나19의 변화 추이



질의응답(Q&A):

Q 1. 올해 중국의 주요 이슈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제 하방이라고 생각함. 2~4월에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등 주요 일선도시에서 잇달아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이 발생하면서 도시봉쇄 조치를 시행하였고 그 후 베이징(北京)도 준봉쇄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중국 경제 하방 압박이 증대되었음. 6월 초부터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점차 조업재개에 들어서긴 했으나 아직 코로나의 산발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임. 현재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动态清零)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어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 경제성장이 하락하게 되면 취업률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며 나아가 나라의 전반적인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게 됨. 이런 배경하에 항간에서는 공산당 지도부 내부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놓고 정책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중국 정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A 1. 우선 국가발개위 기관 특성상 정부 내부의 이견 유무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 파악한 내용이 없음.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스촨(四川)성 시찰 시 제로코로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힌 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함. 민간에 여러가지 소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함.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증증도가 낮지만 오미크론 감염에 의해 발생한 사망자 수는 여전히 상당한 숫자에 달한다고 함. 최근 타이완의 경우 매일 사망자가 100~200명 발생하고 있음. 타이완의 인구수가 2,300만 명인데 이런 비율대로라면 중국의 경우 매일 몇 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많은 생명을 희생하는 것은 절대 감수할 수 없는 것임. 그리고 오미크론의 낮은 사망률은 보편적 면역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함. 해외의 한 연구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오미크론의 사망률은 델타보다 낮지 않을 것이라고 함. 중국은 노인과 기타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률이 비교적 낮은 수준임. 상하이(上海)의 코로나 백신 2차접종률이 대략 60%밖에 안 되며, 전국 3차접종률은 더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함. 고위험군의 낮은 접종률은 중국이 우려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는 전제에서 방역 정책을 완화시키기 어려울 것임. 그리고 오미크론은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높은 특징이 있음. 오미크론의 증증도가 낮다고 하지만 실제로 오미크론 감염에 의한 미국 사망자 수는 이전의 다른 변이 바이러스 감염의 사망자 수를 초과했다고 함. 그러므로 오미크론을 결코 약한 바이러스라고만 판단할 수는 없음.

Q 2. 발표내용 중에 2분기 경제 상황이 어떤 측면에서는 우한 사태 시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2분기 성장률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추진한 후 하반기 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A 2. 현재 4월 데이터가 발표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고 여러 주요 지표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음. 2분기 성장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5월 데이터를 보아야 하는데 5월 데이터는 6월 15일쯤

에 발표될 예정임. 5월의 일부 선행지표를 보면 4월에 비해 현저히 상승하였음. PMI는 아직 50 미만이지만 4월보다 상승하였고 모든 세부 항목들이 전월 대비 상승하였음. 오늘 발표한 수출 데이터를 보면 성장률이 대략 16%에 달하여 기대치를 초과하였음. 5월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4월보다 개선되었을 것으로 예상함. 2분기 성장률에 대해 3%대로 예상하는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3%대에 도달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함. 2분기 성장률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측하는 의견도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볼 때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는 건 문제없다고 생각함. 구체적인 성장률 수치는 5월 데이터를 참고해야 알 수 있으며 향후 코로나19의 동향이 관건이라고 생각함. 요즘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감염자가 또다시 늘어나는 상황이 보도되고 있음. 앞으로의 코로나19 동향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렵지만 코로나 확산이 안정적으로 통제된다는 전제하에 올해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을 통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함.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금융위기 때와 다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경제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8년내지 10년 정도 지나서야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했음.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는 경제가 회복하는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함. 최근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미국 경제가 매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자랑한 것을 보았음. 코로나19가 경제성장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경제가 아주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함. 2020년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6.8%이었다가 4분기에 6.5%를 달성하였음. 중국 자체의 이런 경험으로 볼 때 코로나19 요인이 없다면 경제가 아주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함.

Q 3. 중국이 특별채 발행 등 조치를 통해 돈을 많이 풀었을 때 올해 하반기에 미국 등 서방국가들처럼 물가 압력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3. 중국이 직면한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주로 수요측에서 오는 것이 아님. 말씀하신 올해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발행규모는 3조 위안이 좀 넘는데 GDP 규모가 100조 위안 이상인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 밖에 안 되는 수준임. 중국의 코로나19에 대응한 GDP 대비 재정투입 비중은 미국에 비하면 양적으로 큰 격차가 있음. 중국이 직면한 문제는 수요부족임. 4월 중국의 소비는 동기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투자도 늘어나지 않았음. 중국의 물가 상승 압박요인은 주로 해외 유입의 원가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며 국제시장에서의 원자재와 식량 가격 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임. 특히 중국은 미국과 달리 주민들에게 많은 돈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CPI 면에서 수요로부터 오는 압박은 거의 없을 것이며 주로 PPI 면에서 기업에 대한 영향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함.

Q 4. 최근 중국 경제 동향을 보면 올해 5.5%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임. 성장률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양회 때 발표한 수준보다 재정지출을 더 늘리고 부동산 등 규제도 큰 폭으로 완화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의 장기적·안정적 성장에 대해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발표 내용 중에 5.5%의 성장률 목표가 취업, 민생, 리스크 예방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제시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성장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위험을 고려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성장세를 목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A 4. 경제 과학은 로켓 과학처럼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률 목표가 어느 정도 수준이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임. 향후 리스크의 변화나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수용 정도, 그리고 국제 경제형세와 외부 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많은 경제위험 요인들이 있으므로 제가 여기서 어느정도가 합리적인 목표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움. 큰 측면에서 대략 말씀드리다면 우선 중국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현재 시점보다 더욱 확대할 여지를 확보하고 있음. 통화정책 면에서 중국이 현재 시행하는 금리와 기준율은 모두 정상적인 구간 내에 있으며 서방국가들처럼 파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음. 또한 중국이 2015년부터 추진해 온 거시 레버리지 비율 감축을 통해 작년에 거시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는데 성공한 것도 더 많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주었음. 중국은 현재 충분한 정책 시행 공간이 있지만 어느 정도 활용할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최근 새로 발표된 경제 안정을 위한 패키지 정책 내용에 보면 원래보다 세액공제 환급 규모를 1,400억 위안 늘린 것 외에 양적으로 확대한 부분이 그리 많지 않음. 새로운 정책은 원래 올 한 해에 걸쳐 달성할 목표를 대부분 앞으로 2, 3분기 안에 몰아서 앞당겨 완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올해 이미 제정한 정책을 확실하게 실행하고 적절히 조기에 실시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임. 2, 3분기가 지나고 나서 그때 상황에 따라 정책을 더 강화할 것인지 결정할 것임. 정책을 조기에 집중시켜 실시하는 것도 정책을 강화하는 방법 중의 하나임.

Q 5. 발표 내용 중에 에너지 소비강도 목표를 "14.5" 규칙 기간 내에서 통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히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에너지의 안정과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에너지 소비나 탄소 배출의 규제 등 정책의 추진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이해됨.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2030년에 탄소피크를 달성하고 2060년 전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이라는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책 추진속도를 늦추게 되면 앞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후반기로 갈수록 부담이 커질 것인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탄소배출에 관련한 중국의 석탄 소비 총량에 대한 규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A 5. 단기적으로 볼 때 에너지 안보는 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임. 현재 많은 유럽국가들의 석탄 소비량과 화력발전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 탄소피크와 탄소중립은 장기적인 목표임.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목표를 실현하려면 주로 재생 에너지와 저탄소 에너지의 발전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함. 재생 에너지와 저탄소 에너지가 발전해야만 전통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음. 재생 에너지와 저탄소 에너지가 아직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화석 에너지를 줄이거나 제한한다면 필연코 경제 발전을 크게 교란시킬 것임. 작년에 일부 지방정부가 탄소 배출 저감의 장기적 목표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여 돌격대식의 무리한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하였음. 탄소피크·탄소중립 목표는 장기적 전략 배치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랜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함. 올해 에너지 관리 정책을 조정한다고 해서 목표달성 속도가 늦춰지거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안정적·계획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대체가능한 에너지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진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가능하기 어려움.

Q 6. 원료용 에너지를 에너지 소비 총량 통제에서 제외시킨다고 하셨는데 원료용 에너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A 6. 원료용 에너지는 주로 화학공업용 석유와 석탄, 그리고 제강 석탄 등을 말함. 아시겠지만 이런 분야의 에너지 소비는 탄소를 외부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총량 통제에서 제외시킴.